

세월호에 과적한 철근 400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백 톤이 실렸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청해진해운 거래처인 여러 물류 업체 관계자, 제주도의 업계 관계자들이 이를 증언했다.

즉 국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 방지 책임만이 아니라, 침몰 원인인 과적과 무리한 출항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다는 것이다.

철근 4백 톤은 참사 당시 세월호에 적재된 일반화물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양이고, 승객 5천 명 수준의 무게다. 더군다나 이 철근 중 1백30여 톤은 선수갑판(C데크)에 실려 있었던 듯하다. 갑판에 화물이 많이 실릴수록 선박의 복원력은 약화된다. 그래서 배가 처음에 기울 때 제대로 고박되지 않았던 이 철근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청해진해운 한 관계자는 참사 당시 실린 철근은

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이었다

· 제국주의를 지원하려다 벌어진

중국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불안정의 불씨를 키울 것이 자명하다.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을 위해 무리하게 철근을 실어나르려다 무고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정책을 지원하려고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만든 책임이 있다.

이윤 경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을 위해 과적을 무릅쓰고 안전은 뒷전에 둔 기업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질서를 철저히 옹호하는 국가가 빚은 비극이다.

“웬만한 진상은 다 밝혀졌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이번 폭로가 보여주듯 드러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백 퍼센트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 세월호는 연간 수 만 톤의 철근을 제주해군기지로 수송했다. 악천후 상황에서 세월호가 무리하게 출항한 게 제주해군기지 공사 기한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국정원이 세월호에 깊이 관여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배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이윤과 정부 관계자 로비에 돈을 쓴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서 중요한 기지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발맞춰 제주해군기지에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고사드(THAAD)가 배치될 것이다. 한미동맹 속에서 지위 상승을 추구하는 남한의 역대 정부들(노무현 정부 때부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고, 박근혜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억누르며 기지를 완공했다. 동아시아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침몰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6월 말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는 용의자가 직접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정부의 진실 규명 은폐 시도에 맞선 분노를 모아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2016. 6. 23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stu.workerssolidarity.org